

특별강연II

| 일시 2017년 10월 26일(목) 16:45 ~ 17:30 | 장소 컨벤션 A홀(B1)



이정훈

동아일보 출판국
편집위원

이제는 원자력정치학이다

정치는 정치로만 움직이지 않는다. 비정치적 것을 논의하는 것이 정치가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 점에서 강력한 힘을 내는 원자력은 좋은 정치의 주제가 된다. 원자력 정치학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건은 현 정부의 탈핵 정치다. 더 들어가 보면 1945년 일본에 대한 미국의 원폭 투하와 그 전후에 있었던 열강들의 핵 개발, 1994년 미북이 맺은 제네바 합의, 그리고 지금까지도 전개되는 북한의 핵개발 등도 있다.

한국 원자력계는 배가 불렀다. 정부의 보호와 지원을 받으며 콧대 높게 발전해왔기에 정치에 주목하지 않았다. 정치는 매우 교묘한 분야인데, 무시하고 교만하게 살아온 것이다. 그리하여 그 반작용으로 지금 탈핵정치에 직면했다. 상대는 정치로 나오는데, 원자력계는 공학으로 대응한다. 전쟁이라면 공학이 정치를 이길 것이다. 그러나 전쟁이 아닌 데에서는 정치가 공학을 지배한다. 5대 핵보유국과 북한은 정치 지도자들의 결단으로 핵무기를 개발했다. 한국이 세계적인 원전 강국이 된 것도 정치 지도자 덕분인 것을 안다면 평시의 정치는 원자력 공학을 이긴다.

정치 분위기가 바뀌어 탈핵정치가 시작됐는데, 원자력계는 여전히 정치보다는 공학적으로 대응을 한다. 공학적인 대응으로는 국민 마음을 얻기 어렵다. 원자력은 다른 공학과 달리 차관급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갖고 있어 정치화하기 좋은 공학이었는데, 원자력계 인사들은 행정부에 진출하지 못했다. 우주와 원자력계 인사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주력이 됐어야 하는데, 그곳은 행정고시를 통과한 인문사회계열 출신의 공무원이 차지하고 있다.

학제간 연구를 중시하는 융합의 세상이다. 이제 원자력계는 정치인과 공무원을 배출해야 한다. 군인 출신 정치인이 나오듯 원자력공학 박사 출신의 국회의원이 나와야 한다. 연예인도 만들고 언론에도 진출시켜야 한다. 아니면 원자력 공학계는 주변은 잡아당겨야 한다. 정치인과 예술인, 기자를 만나 즐거운 원자력을 보여주어야 한다. 원자력은 공학에 머물러 있으면 안된다. 원자력 정치학으로 나가야 한다.

원자력은 이제 상당히 발전했기에 국가의 보호를 받기 어려워졌다. 그렇다면 민영화로 가야 한다. 한수원은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같은 기업으로 원자력연구원은 자생력 있는 민간 연구기관으로 변모해야 한다. 현정부가 던져준 화두는 이것이다. 탈핵정치에 싸우면서 정치에 끌려가지 않고 오히려 정치를 끌고가는 원자력이 되려면 원자력은 완전 경쟁을 요구하는 민영화의 길로 가야 한다. 그것이 원자력을 정치화하는 한 길이다.

